

‘대학원중심대학’, 무엇이 문제인가

대학원중심대학의 과제와 재정 확보 방안

이 현 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장

1. 서 언

대학원의 기능은 지식의 창조, 지식의 응용 그리고 지식의 분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원의 실상을 감안해 볼 때, 이러한 세 가지 기능 중 어느 것 하나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되지 못한다는 점은 대학원 교육에 관심을 두고 있는 이들의 공통된 견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구나 대학원의 기본적인 기능에 비추어 순수한 학문적 연구 혹은 지식의 창조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으나, 사회경제적 변동의 측면에서 볼 때에 21세기를 대비한 고도 기술사회에서의

대학원의 역할은 오히려 지식의 응용과 분배의 기능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한 실정이다. 이 점에서 특히 대학원중심대학의 기본 성격과 기능, 학생선발 및 관리체제, 교과운영 및 학사 운영상의 문제 그리고 연구체제 등을 감안할 때 ‘대학원중심대학’의 개념 정립이 우선 검토되어야 할 시기이다.

우리나라 최초로 국립서울대학교 설치령에 의해 1949년 석사 90명을 배출한 이래 우리나라 대학원의 발전 과정을 살펴볼 때, 그 목적과 기능뿐만 아니라 정원 등의 변화 과정이 주는 시사가 크다. 우선 1953년에 제정된 대학원 운영에 관한 대학원 규정¹⁾에 의하면, 대학원 교육의 목적을 ‘대학교육 목적을 일층 精深하

1) 문교부령 제 8호 대학원 규정(1953. 10. 20).

게 추구하는 동시에 학술 연구의 지도 능력과 독창성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에서 출발한 우리나라 대학원 교육은 1980년대 이후 급격한 양적 성장을 거듭하면서 1994년 현재 101개의 일반대학원과 249개 특수대학원에서 석사과정 86,329명과 박사과정 17,654명의 재학생을 가진 엄청난 규모로 팽창을 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학원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는 심각한 실정이다. 한마디로 대학이 안고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대학원 교육 특유의 문제까지도 안고 있는 실정이다. 근래 '대학원중심대학'에 대한 논의가 일면서 급속한 양적 팽창이 있는 반면, 제도적으로나 과정적 측면에서 볼 때 개혁의 소지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 형편이다. 더구나 우리나라 대학원은 대학의 부수적 교육기관 정도로 인식되어 왔던 것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학원 교육의 과제를 재점검하고 그 개혁 과제를 조망하는 일은 절실한 과제이다. 이 점에서 대학원중심대학의 재정 확보 방안의 과제는 더욱 더 절실한 실정이다.

2. 대학원중심대학의 과제

근래 들어 '대학원중심대학'이란 용어가 일반화되고 있으나, 대학원중심대학의 개념이 불분명한 상태이다. 대학원중심대학의 개념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며, 대학원중심대학의 특성과 구비 요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일반적 개념화가 불분명한 상태이다. 또한 현실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선도 대학에 속하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대학원중심대학을 표방하고 있으며, 장·단기 발전계획에서도 대학원중심대학의 추진을 구체화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원중심대학을 설정하고 추진하기 전에 우선 고려되어야 할 과제가 있다. 그것은 대학원과 학부과정을 어떻게 설

정할 것이며 규모 면에서도 대학원 학생수와 학부 학생수의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대학원 전입교수와 대학원 연계 프로그램 그리고 대학원의 연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연구소 등이 충분한지의 과제이다.

따라서 대학원중심대학의 첫번째 과제는 대학원중심대학의 개념화와 대학원중심대학의 특성 규정이라 할 수 있다. 대학원중심대학은 학부 학생수와 대학원 학생수가 최소한 동일한 규모가 전제되어야 하고, 교수 확보도 대학원 중심 교수제를 도입하며, 대학원 커리큘럼의 내실화는 물론 대학원 '독립예산제'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물론 대학원중심체제가 갖는 하드웨어 부분과 관련하여서도 대학원 행정체제를 별도로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대학원중심대학은 소위 최고의 전문직을 양성하는 전문기업(professional enterprise)의 기능과 바른 지식, 바른 신념, 바른 실천으로 대변되는 新 3R(right knowledge, right belief, right practices) 기능인 도덕적 기업(moral enterprise) 그리고 연구하는 학자 양성의 기능인 학문적 기업(academic enterprise)의 세 요소를 모두 포괄하는 체제와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대학원중심대학의 특성은 '대학원다운'(graduate-like)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동시에 구비된 것을 전제로 한다.

두번째로 대학원의 설치 및 종류에 관한 사항을 보면, 현행 교육법 109조에 종합대학교와 단과대학에 대학원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대학원의 설치 기준에 대해서 교육법, 교육법 시행령 및 대학원 규정의 어느 곳에도 특별한 규정이 없고 대학원 또는 대학에 설치된 학과에 한해서 대학원 과정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학과 설치에 대한 제한만을 두고 있다. 이러한 대학원의 설치 기준과 관련해 볼 때, 대학원중심대학의 특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도 필요한 실정이다.

세번째로 수업연한 및 입학 자격을 볼 때,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석·박사 과정 구분 없이 2년 이상을 수업연한으로 규정하고 있다(교육법 제112조). 또한 교육법 시행령에서는 대학원에서 1년 이상 수학하고 전공과목 24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는 석사 학위논문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박사 학위과정은 3년 이상 수학한다고 함으로써 구분을 하고 있다. 입학 자격에서도 교육법에서는 석·박사 과정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으나,²⁾ 대학원 규정에서는 석·박사 학위과정에 대한 입학 구분을 두고 있어 혼선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대학원에 관한 교육법규상의 문제점을 고려해 볼 때, 현재 우리나라 대학원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일이 대학원 중심대학의 선결 과제가 될 것이다. 대학원에 관한 법규상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대학원의 교육 이념이 추상적이고 학문중심적이며 현대 산업사회에서 요구되는 기능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 ② 규정상 대학원 설치 및 종류에 관한 명백한 규정이 없다.
- ③ 수업연한이나 석·박사 과정의 명백한 구분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 ④ 학사, 석사 및 박사학위의 종별에 대한 구별의 기준이 일정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대학원 교육의 기능은 석·박사 과정의 구분 없이 연구, 대학교원 양성, 고급 전문인력 양성 및 사회봉사의 기능과 함께 재교육과 계속교육의 기능도 아울러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원 종류도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독립대학원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일반대학원과 독립대학

원이 대학교원 양성 기능을 수행하고, 전문대학원은 재교육 및 계속교육 기능을 주로 담당하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대학원 기능과 목표뿐만 아니라 양적 팽창의 문제에서 비롯된 대학원 교육체제와 체계(structure)의 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전임 교수의 확보 문제, 대학원 중심 커리큘럼의 정립 문제, 학사 관리의 엄중성 문제, 독립예산제나 독립체제의 확립 문제 등의 제반 문제들이 산적한 실정이다. 더구나 우리나라 대학원 교육은 80년대 이후 급격한 양적 팽창의 결과, 그 구조적 측면에서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능적 측면에서도 교수 요원의 양성과 산업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 및 고급인력의 양성 공급 그리고 대학 이후 단계에서의 재교육 등으로 다원화될 필요성이 절실하다. 그러나 현행 대학원 교육은 급격한 양적 팽창과 방만한 운영으로 질적 수준 또한 불만족스럽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학원중심대학의 과제도 이러한 관점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21세기의 변화 가운데 대표적인 것의 하나는 각국간의 '교육 계층화 현상'으로서 대학원 교육의 성공 여부가 세계 교육산업화시대(educational industrial society)에서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관건이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학원이 내포하고 있는 제반 문제와 함께 전환기적 교육산업시대의 욕구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개혁이 요구된다. 이 점에서 대학원중심대학의 기본 과제는 다음 몇 가지 전제조건 속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 ① 대학원 교육의 질적 수월성 확보
- ② 시대상황에 부합하는 대학원의 목표, 기능, 교육과정, 학사관리체제 등의 다양화
- ③ 연구 기능 못지 않은 교수와 봉사 기능의

2) 교육법 제112조는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대학, 사범대학, 교육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화

- ④ 대학원 교육에서 사회적 책무성(accountability)의 강화
- ⑤ 학부과정과 대학원 교육과정의 확연한 기능 정립
- ⑥ 대학원 교육의 특성화

이상의 관점에서 대학원중심대학의 과제 또한 다음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1) 대학원 교육이념과 체제

현행 한국의 대학원 교육의 목적은 추상적이고 목표가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학문중심의 강조로 인해 전문직업인 양성 및 사회봉사의 기능이 결여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대학원만의 독립된 교육목표의 미비와 기능의 미분화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교육목표의 구체적 명시화가 필요하며 대학원 자체의 교육이념 정립과 아울러 목적과 기능을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 물론 석·박사 과정의 기능적 역할 분리와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의 목적과 기능의 재정립도 필요하다.

대학원 교육체제의 측면에서 볼 때에도 대학과 대학원 간의 불분명한 체제적 불합리성과 석·박사 과정의 기능이 미분화된 점 등이 개혁 과제라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전문대학원과 일반대학원의 이원화를 확고히 하든지 아니면 여건의 정립후 일원화 방향으로 개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대학원이 독자적인 체제로 기능할 수 있는 체제 확립이 필요하다.

2) 입시제도

현행 대학원제도의 입학 자격요건은 석·박사 과정이 엄격히 구분되어 있는 이원체제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입학전형을 필기시험 위주의 대학원위원회나 대학본부관리의 중앙통제식에서 탈피하여 석·박사 과정간의 연결성 약화를 방지하고 석·박사 과정을 통합 운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연구의 일관성

과 시간성을 확보할 수 있고 획일적인 제도에 의해 입학시험이 치러짐으로써 각 학과 특성에 맞는 선발을 어렵게 하는 점도 극복할 수 있다. 또한 총점 순위에 의한 필기시험 위주의 학생 선발로 진정한 잠재능력의 측정과 신뢰도 및 타당도가 높은 제도를 정립시키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원의 입시제도 개선방향은 석·박사 과정을 통합 운영하되, 선별적 단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신입생 선발권도 중앙통제식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학부와 대학에 위임함으로써 선발권을 분권화시킬 필요가 있다. 물론 선발기준을 필답 고사 위주에서 면접 구술 고사, 학부 성적, 지도교수 추천, 특별경험 입학제, 외국인 특별전형제, 무시험제 등을 포함한 다양하고 개방적인 선발체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3) 정원 및 학사관리

우리나라 대학원 학생수의 급격한 증가는 1980년 이후 급증된 전문대학원의 신설에서 기인한다. 계속교육의 성격을 지닌 전문대학원의 경우, 인력 수급상 차질의 우려가 없으므로 융통성을 부여하는 것도 무방하지만, 연구 요원이나 교수 요원의 양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일반대학원의 경우는 정원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정원 및 학사관리는 대학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몇 가지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첫째, 일반대학원의 경우 석·박사의 인력 수요에 부합하는 정원 정책이 필요하며 정원의 팽창을 억제함으로써 질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문대학원과 계절제·야간제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는 교육 여건을 감안하여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학원중심대학과 학부중심대학을 구분하여 대학원중심대학에 대해서는 석·박사 과정의 정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대학원의 학생정원은 계열별로 총정원만 책정하고 각 학과별 정원 배정은

정부가 제시한 배분 지침에 따라 개별대학 스스로 정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대학원의 학사관리는 계속교육을 주기능으로 하는 대학원의 경우와 학문지향적 대학원의 경우로 구분하여 이원화할 필요가 있고, 특히 계속교육을 주기능으로 하는 대학원에서는 전문가 프로그램(specialist program)을 개설 운영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석·박사 학위를 학문중심 학위 과정과 전문 학위과정으로 구분하여 입학과 졸업 요건, 교육과정 및 학사관리 등에서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학생 선발과 이수 학점 인정 등에서 전공 학과나 출신 학과를 제한하지 않도록 하며 학점단위등록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4) 대학원 교육의 질적 관리

대학원 교육의 질적 관리는 대학원 교육의 가장 핵심적 과제라 할 수 있다. 우선 각 대학원 수강생 수가 저조하기 때문에 학문의 효율성과 수월성 추구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이 뿐만 아니라 학점수와 수업연한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학점 이수 요건이 적은 경향이며, 대학원 협동과정의 운영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학문연구 교류가 저조하고 학업에 전념하지 않아도 학위 취득이 쉽다. 물론 학생의 논문지도 과정과 학교 시설 이용이 어려운 실정도 지적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정 운영의 비효율성 외에도 연구 참여기회의 제한, 연구 시설의 미비 그리고 장학금의 부족 등에서 비롯된 면학 여건의 미비점도 심각한 문제이다.

한편, 학위수여 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해보면 논문 제출 자격시험의 획일성과 함께 엄정성의 결여, 교수 논문지도의 소홀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제반 문제들은 결국 대학원 교육의 질적 관리를 위해 몇 가지 개선방향을 요구한다.

첫째, 대학원간의 협동체제 확립, 학점취득

이수 요건의 강화, 전임등록제 실시, 타대학 학점 인정의 제도화 및 연구등록제의 실시가 필요하다. 둘째, 장학금제도 강화 및 유급 조교의 확대, 산·학·연 협동 프로그램의 강화 및 연구 시설의 확충이 요구된다. 셋째, 논문 제출 자격시험의 학과별, 학부 특성에 따른 다양화와 자격시험의 강화 그리고 학문 학위와 전문 학위의 이원화가 필요하다. 넷째, 논문 지도 시간의 확대와 질적 관리 체제의 확립이 필요하다. 다섯째, 대학원 평가인정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대학원뿐만 아니라 전문대학원과 대학원 관련 연구소 평가인정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대학원 교수평가제도 도입되어야 한다.

5) 교육·연구 여건

현재 대학원 교수 인력의 대부분은 강사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교육내용에서 체계적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지도의 부실과 학사관리상의 제약 등의 문제가 대두되어 왔다. 따라서 대학원 설치 기준을 별도로 개선하여 교육·연구 여건을 강화하고 교수들의 대학원 전임제 운영 연구 활동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6) 학위의 종류와 명칭

현재 학위의 종별 구분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학문중심학위와 전문학위가 구분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학위 명칭 및 종별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문학위와 전문학위로 이원화하되, 전문학위 명칭은 확대 개편하고 학문학위는 현재보다 대폭 축소할 필요가 있다.

7) 행·재정 지원체제

앞서도 논의한 바대로 대학원 설치기준령을 제정하여 대학원 체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평가인정체제를 통하여 주기적인 운영평

가를 실시하여 질 통제를 하여야 한다. 아울러 대학원의 연구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대학원 부설 특수법인 연구소를 장려하고, 산·학·연 협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행·제정적 지원체제를 강화하여 대학원 협동연구 기금과 대학원-산업체 공동연구망(graduate school-industry research links)을 설치할 필요성도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의 하나는 대학원 나름대로의 관리체제를 정립하는 일이며, 학점취득 비율에 따라 등록제도를 개선하는 일이다. 아울러 대학원중심대학과 대학원 병설대학, 단설대학원, 대학원 학부 등의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3. 대학원중심대학의 재정 확보 방안

대학원중심대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나라 대학원 교육이 안고 있는 제반 과제를 해결해야 가능하고, 현재 많은 대학들이 추구하고 있는 대학원중심대학의 이상도 실현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무엇보다 절대적인 관건이 특성화와 다양화를 유도할 수 있는 재정 확보 방안을 강구하는 일이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교육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타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특히 대학원 교육에 대한 국고지원은 매우 열악하다. 민간재원과 정부재원을 합한 연구개발비 총액의 9.9%만이 대학에 투자되고, 70%가 기업체에 투자되며, 나머지는 연구기관에 투자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정부 연구개발비의 76.2%가 연구기관에 투자되고, 16%만이 대학에 투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현실은 우리의 대학교육, 특히 대학원 교육 여건을 열악하게 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대학원중심대학의 주요한 기능이 자원과 연구, 즉 2R(resource & research) 기능이

며, 전문성과 학문성의 제고에 있기 때문에 재정 확보의 대안이 없이는 학부과정의 보편적 지식을 보충할 길이 없다. 이 점에서 재정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

1) 국고보조금 확대 : 대학원 교육 보조금제도 대학원중심대학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책대학원'안도 이와 관련된 것이지만, 고등교육 예산을 확대하되 별도의 대학원 교육 보조금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대학원 교육 보조금제도는 몇 가지 준거에 의해서 배분할 수도 있고, 특성화와 다양화를 위한 제도화도 가능하다. 이러한 대학원 교육 보조금제도는 ① 국책대학원 기금, ② 인문사회 특성화 대학원 기금, ③ 국제전문인 양성 대학원 기금, ④ 기초과학 대학원 기금, ⑤ 대학원 교수개발 기금, ⑥ 대학원 컨소시엄 지원금, ⑦ 대학원 학생 프로젝트 기금, ⑧ 대학원 프로그램개발 기금, ⑨ 대학원 복지기금 등 여러 형태가 가능할 것이다.

2) 대학원 공채의 발행

대학원 공채를 발행하는 방안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나, 대학원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국·공채와 개별 대학 차원의 학교채의 적극적인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별 대학원이 공채를 발행하여 재정적인 확보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교육공채의 발행은 신중해야 하며, 발행 규모나 원리금 상환 등에 관련된 세심한 배려가 전제되어야 한다.

3) 대학원 자구노력 기금 : 수익활동과 발전 기금

대학원 재정 확보 방안의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대학원 차원의 자구노력 방안이라 할 수 있다. ① 대학원 발전기금, ② 대학원 목적

기금, ③ 대학원 동창기금, ④ 대학원 특별과정 기금, ⑤ 대학원 장학기금 등 다양한 형태의 자구노력 방안이 요구된다. 이러한 자구노력 기금은 수익사업 형태로부터 기부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다.

4) 등록금 : 고등록금제 / 저등록금제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할 때, 대학원 등록금은 주요한 제한이다. 그러나 대학원생의 등록금은 가능한 한 저등록금 원칙이 필요하다. 이 점에서 대학원 등록금 제도는 고등록금제와 저등록금제를 동시에 활용하되, 대부분의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과 함께 최소한의 등록금만을 부담하는 저등록금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학원중심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한데, 이러한 대안은 상대적으로 소수 학생들의 고등록금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재정적 보완을 이룰 수 있다. 이러한 고등록금 제도는 ① 기여대학원 입학제, ② 특별과정 입학제, ③ 프로젝트중심 입학제, ④ 추천입학제, ⑤ 논문입학제 등의 다양한 방법이 가능할 것이다.

5) 대학원 대여제

대학원중심대학의 학생들에게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혹은 개별 은행으로부터 대학원 교육 이후 취업시 상환할 수 있는 장기 저리 대여 등록금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대학원 대여제(graduate loan system)로서 학부 학생들과 별도로 관리 운영될 수 있다.

6) 연구단지 조성 기금

대학원중심대학에서 재정 확보 방안으로서 가장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연구단지 조성 기금이다. 연구단지 조성 기금은 research park에 의한 공동연구 기금이나 연구기여기금, 연구조성기금 등으로서 이미 여러 대학에서 도입하고 있는 재정확보 방안이다.

7) 공동학위 기금

산업체와 공공기관과의 공동학위(joint-degree)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러한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공동학위 기금(joint-degree fund)을 운영할 수 있다.

8) 첨단과학 연구기금

첨단과학 연구기금은 과학재단, 학술진흥재단, 국제협력재단, 정부 출연기관, 외국의 첨단 과학단지나 관련기관 그리고 기업체 부설 첨단 과학 연구기관과의 공동협력에 의해 대학원 연구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이때 시설·설비의 공동활용 그리고 연구진의 공동구성 이외에 별도의 대학원중심대학에 대한 별도의 첨단과학 연구기금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9) 시설확충 지원금

대학원 시설확충과 관련된 한시적인 특별시설 확충 지원금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즉, 일정 기준에 부합된 대학원중심대학에 대해 보상적 지원을 하고, 일정 기준에 미흡한 대학원중심대학에 대해서는 보충적 지원이나 장학적 지원을 하는 방안이다.

10) 장학금

대학원중심대학에서의 장학금 확충은 간접적 재정지원의 좋은 예이다. 미국의 경우도 연방 정부의 지원이 학생복지 차원, 특히 장학금과 교육채(educational voucher) 그리고 시설지원을 확대시키고 있음을 감안할 때, 대학원생들의 경우는 비정부 차원의 장학금과 협력장학금 제도가 장려되어야 한다.

11) 대학원 연구풀제

대학원중심대학의 간접적 재정 확보 방안의 하나는 대학원 연구풀제도(graduate research pool)에 의한 시설·설비 투자나 연구 인력의

간접적 활동 방안이다. 이와 함께 대학원 연구 벨트(graduate research belt), 발명이나 연구 결과의 제품화를 위한 공동 연구센터인 창조적 연구센터(creative research center), 인터넷 대학원(internet graduate program) 등 다양한 연구플래 운영에 의한 간접적 재정 확보 방안이 가능하다.

12) 국제 대학원 연구 협력기금

국제 대학원 연구 협력기금은 외국 우수 대학원들과의 협력방안으로 석사과정의 경우 1+1제 운영, 박사과정의 경우 2+3제나 3+1제 등의 운영에 의한 간접적 재정 확보 방안이다. 단순히 외국 대학원들과의 관계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국제기구, 국제적인 연구소, 다국적 은행인 아시아은행과 세계은행 등과의 연구 협력에 의한 재정 확보 방안이다.

4. 결 론

우리나라 대학 중에서 현실적으로 대학원중심대학이 될 수 있는 대학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대학원중심대학에 대한 올바른 개념 정립이 있는 후 대학원중심대학 이상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 대학원 교육이 안고 있는 제반 과제들이 해결되어야만 대학원중심대학이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학원과 학부체제의 확연한 정립, 재정 확보 방안의 강구, 법제도적 정비, 대학원 교육의 질적 관리체제 등의 정비가 병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정 확보가 대학원 교육의 질을 결정짓는 관건이라는 점에서 특성화나 다양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다양한 지원과 함께 여러 형태의 자구노력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대학원중심대학은 여건의 충분한 검토와 올바른 개념 정립 없이 현 체제로는 어려움이 많은 체제라는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

이현청/한양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남일리노이 대학에서 교육과학 석사,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남일리노이 대학과 사우스 캐롤라이나 대학의 교수를 역임하고 부산대 교육학과 교수를 거쳐 현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장으로 재직중이며, *Higher Education Policy*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교육사회학』, 『학습하는 사회』, 『교육사회학 이론과 전망』, 『사회교육학 서설』 등이 있고,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